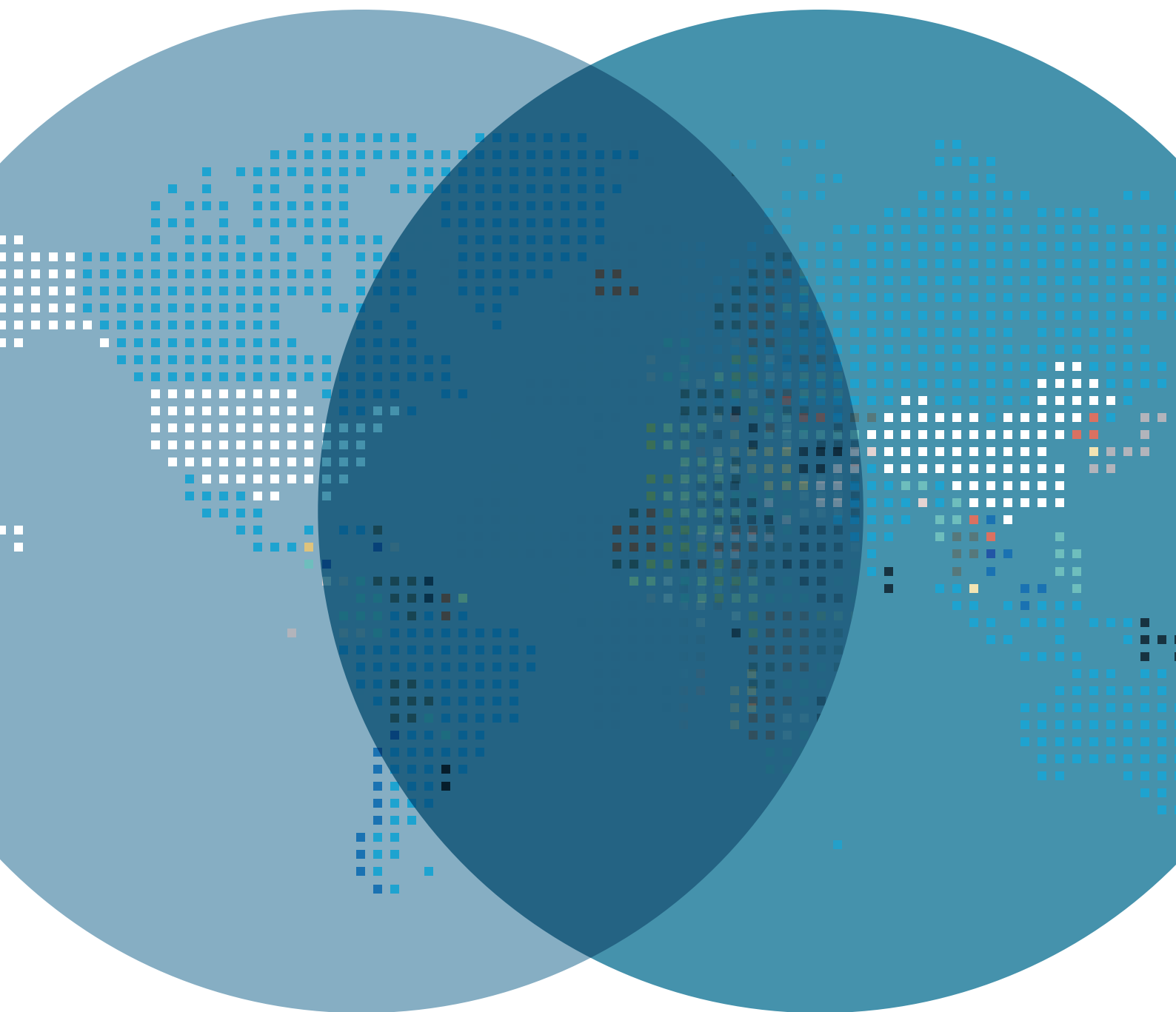


#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글.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미국의 대중 정책은 오바마 시절까지는 협력을 위주로 한 관계에서 트럼프 시절에는 갈등과 충돌의 시기로 전환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3Cs(conflict, competition and cooperation)를 결합하는 전략으로 설명한 바 있으나, 최근 '경쟁'을 축으로 하는 방향으로 대중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 본격화한 미중 전략경쟁은 강대국 정치, 경제·과학·기술의 안보화, 지정학의 부활, 자조(自助)적인 대외정책의 만연 현상을 강화하였다. 미중 전략적 경쟁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였다. 예상을 뛰어넘은 급속한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인 대외적 행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국내정치 지향적인 분위기, 미국의 대중전략의 실패가 어울어진 결과였다. 변화한 미중 역학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규범과 관계 설정을 모색하는 일종의 전환기가 시작되었다. 단-중기적으로 미중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힘을 과신하며 중국을 압박하였다. 초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중국은 점차 정교하지 못한 트럼프의 대중정책으로 미국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인지하였다. 반면, 바이든과 그 측근들은 상당히 오랜 대중국 경험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중국은 미국이 체계적으로 대중국 전략을 가지고 압박하는데 긴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돌발적인 행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장기전에 능한 중국으로서는 오히려 부담이 줄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행했던 서양식 체스게임이 아닌, '미국식 바둑두기'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충돌에 직접 돌입하기보다는 중국처럼 포석을 해가며, 우방국들과 반중국 동맹을 형성하여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미중 간 '신냉전'의 세계라 불려도 무방할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미중 간 구조적인 경쟁의 최근 표현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구상의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을 바탕으로 쿼드(QUAD),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G-7, D-10, 영-호-미국 안보

협약(AUKUS)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펜스 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당 체제와의 대결을 선언하였다. 미국의 싱크탱크들 역시 시진핑 주석을 한 국가의 지도자 내지 공화국의 대표자인 국가주석(President)이 아니라 공산당 지도자인 총서기(General Secretary)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동의한 바 있다. 중국 지도부는 미중 갈등을 군사적 충돌이 없을 뿐, 사실상 전쟁상태로서 이해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미국과 장기전(protracted war)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이 현 공산당 주도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며, 주요 친미 국가들이 미국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전쟁상태에 있다는 인식이다. 중국은 이러한 위기와 도전을 100년 만에 오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으로 인식한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중심이 서구에서 다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겨와 중국 중심의 시대로 이행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UN 총회 연설에서 중국과 신냉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sup>1</sup> 그러나 미국이 상정하는 현 국제체제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가 대결하는 이분법적 세계 속의 제로섬 게임과 유사하다. 반면 중국의 국제체제관은 '천하삼분론'이다. 미국 중심의 동맹, 중국 중심의 연대, 그리고 서유럽의 EU 체제로 나뉜다. 중국의 기본적 전략은 유럽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어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협력 방안들을 모색하여 유럽이 중국에 직접 대항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추구한다. 중국은 미국의 우호국 중 약한 고리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국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견제 및 관리하는 것이다. 과거 중국의 '중간지대론'을 연상케 한다.

중국은 '전시' 상태의 심리를 가지고, 막대한 재원을 지닌 국가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우월한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 대신 개발도상국들이 필요로 하는 경제 인프라·건설

1 <https://news.un.org/en/story/2021/09/1100502>

을 지원하였다. 중국은 세계 120여개국의 제1 무역 상대국이다. 세계 제1의 제조업 능력을 바탕으로 COVID-19 시기에 가난한 국가들에 대해 보건·방역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COVID-19과 미중 전략경쟁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국제체제에서 수적인 지지로는 미국이 중국에 밀리는 형국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할 정도로 군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부상뿐만 아니라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던 첨단 기술·혁신적인 무기체계, 군사력 운영방식을 중국도 체득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은 유사시 미국의 군사개입을 억제할 만큼 효과적이다.<sup>2</sup> 미중 간에는 의도하지 않은 사소한 충돌이 대전쟁으로 전환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대만문제는 민감하다. 그러나 강대국간 전쟁은 인류 전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미중은 공유하고 있다. 미중 간 실제 핵무기 보복능력과 같은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여 세계대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로서는 국제정치 내 역량 변화에 합당한 규범과 규칙에 합의할 때까지 미중 간에는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는 양상이 지속되는 ‘뉴노멀’ 상태의 지속을 예상할 수 있다. 양국 모두 파국적 충돌은 피하되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갈등과 국제관계 질서의 조정은 불가피하게 추구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 시기 국제정세는 냉전시대와 같이 진영 간 대립구조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미중도 공식적으로는 ‘냉전’을 부인한다. 주요 행위자들의 수도 늘어난 상황이라서 셈법도 더 복잡하다. 경제는 그간 시장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전례없이 통합된 상황이다. 그 결과 강대국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있고, 세계적 차원의 가치사슬이 존재하여, 미중 간의 극한 무역전쟁은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 모두 상당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은 지정학 요구(geopolitical

2 이에 대해서는 Christian Brose, 2020. The Kill Chain (New York: Haachette Books)

imperative)에 충실한 대외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COVID-19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강대국들은 자국의 국익을 노골적으로 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혼란상을 보여주었다. 미중은 대규모의 전쟁으로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후 10년은 싸움을 관리하면서 헤어지기(decoupling)를 시도하는 과정이 예상된다. 국제질서의 유지와 공공재를 위해 기여하는 중심 행위자가 없는 G-zero 시대의 도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세계는 더욱 혼돈스럽고, 가파른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보다는 미국측에서 변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 미중 전략경쟁의 승패도 미국의 국내정치 변화에 따라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은 이러한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향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도 크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년 3월 개최된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7월 미국무 장관 웬디 셔먼의 중국 방문-10월 미국 제이크 설리번과 중국 양제츠의 회동 결과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닌 대중국 전략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미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확약하였고, 바이든의 “책임있는 경쟁(responsible competition)”과 “가차없는 외교” 선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부 대표의 “지속가능한 공존(durable coexistence)” 개념 등은 미국 대중 정책에 있어서 강-온 양면의 유연한 결합이라기보다는 대중국 전략경쟁의 의지 약화로 비춰질 혼돈스러운 메시지를 발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세 가지 최저선(bottom line)과 두 개의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체제, 발전경로, 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중국에 대한 잘못된 정책과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sup> 미중 전략경쟁 시기 중국이 두

3 “China Puts forward two lists during talks with visiting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Xinhuanet. October 9, 2021.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7/26/c\\_1310087197.htm](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7/26/c_1310087197.htm)); “Wang Yi Meets with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Wendy Sherman,” July 26, 2021. ([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895278.shtml](https://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895278.shtml))

려워한 것은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과학기술 역량과 외교적 네트워크, 그리고 군사적 역량을 발휘하여 미중관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다. 대만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트럼프는 이것조차 흔들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중국을 대하였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중국 측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3월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을 비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를 최악으로 가져가는 것은 곤란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국내정치에도 부담이 되는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최저선인 대만 문제만큼은 보장한다는 전략이었다. 바이든 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대중정책의 최저선을 스스로 제시함에 따라,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피한 것이고, 이제 그 위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전략적 융통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미국은 대외적으로 견고한 반중국 동맹을 형성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과거와 같이 압도적 힘과 경제력으로 외교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배’가 몰고 올 파괴적 영향력에 대한 경고, 민주주의 또는 독재의 양자택일을 촉구하면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동맹들과 우방들을 설득하고 있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하는 미국의 ‘블루 닷 네트워크’나 ‘경제번영 네트워크’ 등에 미국정부가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 따라서 반중국동맹은 자체적 경제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중진국 이상의 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국가들에 한정된다. 유럽의 선진국들내에서 대중국 인식은 급속히 악화되고는 있다. 그럼에도 유럽 주요국가들은 중국을 체제 경쟁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을 지속하길 원한다. 이들 국가는 독자적으로는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여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또한 원하지 않는다. 즉, 유럽은 미국과 동맹하면서도 중국과 협상하고 협력하는 위치에 있다.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유럽을 설득할 실탄이 없고 유럽 또한 유럽 나름의 자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은 천하삼분론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은 유럽이 단합하여 미국 편

에 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내정치 상황이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결과라기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세력 결집의 표출이었다. 문제는 차기 민주당 지도부의 성과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2022년의 중간선거 및 2024년 대선에서 미국 정치의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주당 내 진보파인 버니 샌더스 의원같은 경우는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에 가까워 미국의 동맹에 대한 지출에 대해 비판적이다. 오히려 미국 내부역량 강화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미국 정부가 현재의 반중국 전선 정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이다. 공화당이 반중(反中)에는 동의하겠지만, 실질적 실행을 위해 자원을 사용할 의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향후 바이든 정책이 현재의 기세를 유지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유럽이 미국을 조건 없이 지지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중국이 제안하는 시장 개방 등의 인센티브에 반응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합중연횡에서 연횡보다 합중이 불리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강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현 바이든 정부는 영국-호주와 함께 AUKUS 동맹을 새로이 결성하였다. 미국으로서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차기 행정부는 최대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요구와 이를 장기전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한국이 고려해야 할 주요 변인은 미중 경제규모의 역전현상과 상기 언급한 미국 국내정치의 변화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다. 코로나 사태는 미중 간의 경제 격차를 더욱 축소시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2028년경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은 향후 수년간 5%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록 공급측의 신기술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위를 장악하고 있지만, 중국은 경제 규모와 시장의 확대에 이에 대응할 것이

다. 한국 차기정부는 제2의 트럼프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제2의 트럼프가 야기할 한미관계, 한중관계는 그리 낙관적인 미래가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자체 방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는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도 반도체 산업과 같은 고기술 부문에서 선도적 역량을 지닌 미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을 반중 동맹 전선으로 전환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집요하게 작동하고 한국에 그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중으로, 금년 말에 완료한다. 2023년까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한국의 현재 사드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고도화는 중국이 반대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불가피하게 하기때문에, 사드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차기 정부 2년 차부터 이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 차기 지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차기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의 이익 담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중국은 한국과 크게 마찰을 빚을 것이다. 우선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할 것이고, 중국 군함들이 서해 공역을 넘어 올 것이다. 또한 이어도 주변이 국제 분쟁화될 개연성이 크다. 이어도 공간을 장악하면, 서해와 대한해협, 동해(일본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다. 사드 보복때보다 더 실질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주려 할 것이다. 한국을 타격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도 부담이지만, 반드시 보복을 하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 외교 전략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반면 한국이 수세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중국의 반응은 다소 유연해질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linchpin)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운용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일본이 가장 중요하고, 영국, 호주, 한국이 중요하다. 이 중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곧 일본도 위험해진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과거 먼로주의 시기처럼 축성(築城) 전략으로 돌아가야 하고,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천하가 되는 것이다. 역으로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축이다. 가장 상징적인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을 중국 편으로 돌린다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또한 중국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벌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의 반도체 역량은 중요하다. 이와 같이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일부러 적으로 돌려 완전히 미국 편으로 편입되게 하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균형자(balancer)는 자신이 직접적인 갈등이나 분쟁의 축이 되지 않고, 대신 대립하는 두 강대 세력에서 그 축의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국가를 지칭한다. 이 균형자는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는,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 국가인데, 한 동안 유럽의 국제정치에서 그 역할을 대표적으로 해 왔던 것은 영국이다. 현재 미중 전략경쟁의 판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일본이 가장 가깝다고 본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국 역시 거의 준(準)균형자로 전략적 지위가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너무 균형자적 위치를 강조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만큼 우리의 외교안보적 역량이 중요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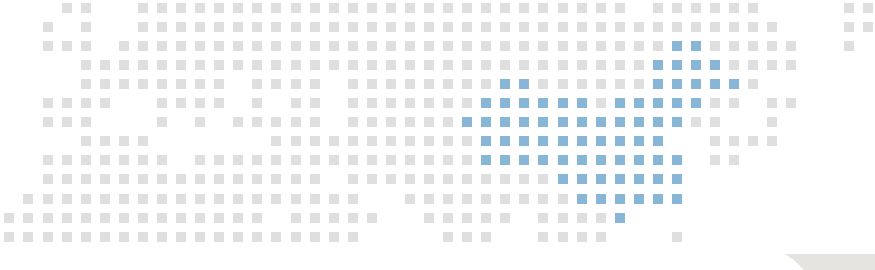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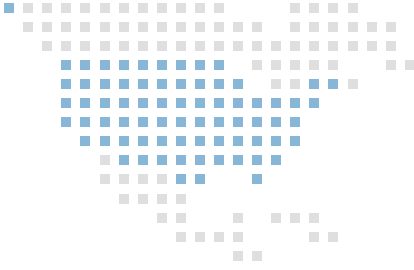
미중전략 경쟁이라는 압도적인 구조적 요인속에서도 한국이 외교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이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고 미리 낙담할 필요는 없다. 미중은 스스로 대립을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할 역량이 부재해 보인다. 이 시기 미국과 중국은 모두에게 '핵심축'인 한국을 향해 우호와 협력의 손을 내밀면서 다가오지만, 뒷 손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미중 모두 극심한 대립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에

##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대한 한국의 대응책은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결적 공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바이든의 미국과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면서도 중국을 적으로 미리 돌리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 트럼프 2.0에도 대비해야 한다. PEW나 갤럽 여론조사에 의거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지닌 국가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가장 박하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의 일반 인식과 괴리가 대단히 크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국내정치에 근거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비용도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조바심에 기인하여 미중 간에 선부른 선택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이처럼 불확실한 전환기의 실리적 외교·안보정책은 성급한 선택의 도박(benefit-maximizer) 전략보다는 비용을 최소화(cost-minimizer)하는 전략이 우선이다.

한국이 커다란 위기에 봉착한 것도 사실이지만 외교 안보의 새로운 공간도 동시에 열리고 있다. 한국은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인 충돌로 가는 상황을 억지하고, 중소국가들도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외교·안보·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강국’ 전략, 그리고 비전으로는 ‘강국으로 약진하는 새로운 국가’ 상을 정립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동북아 지역의 핵확산은 자명해 보인다.<sup>4</sup>

4 최근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Jennifer Lind and Daryl G. Press. 2021. “Five Futures for a Troubled Allianc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3, No.3, September 2021, 357-380.



##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 저자소개

**저자 김흥규**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및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 그는 중국 외교·안보, 동아시아 국제관계, 미중 관계 등의 주제로 연구 중이며 300여편 이상의 관련 글들이 있다.

\* 위 소논문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힙니다.



## Konrad-Adenauer-Stiftung Korea Office

Responsible: 토마스 요시무라 대표

Coordination: 문경준 프로젝트 매니저

[www.kas.de/korea](http://www.kas.de/korea)

 [www.facebook.com/kas.korea](https://www.facebook.com/kas.korea)

 [instagram.com/kas.korea](https://www.instagram.com/kas.korea)



Der Text dieses Werkes ist lizenziert unter den Bedingungen von "Creative Commons Namensnennung-Weitergabe unter gleichen Bedingungen 4.0 international", CC BY-SA 4.0 (abrufbar unter: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legalcode.de>)